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60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4.

발 의 자 : 권영세 · 김소희 · 주호영
박대출 · 구자근 · 이인선
안철수 · 강대식 · 한지아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-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.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,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.

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음. 공익제보단 운영 이후 3년간 총 477,305건의 불법이륜차 공익신고가 시행되었고, 주요 공익신고 항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6% 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.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대상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
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주체를 시·도지사까지 확대
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(안 제57조의4
신설).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4(공익제보단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익 신고한 자(이하 “공익제보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2제3항, 제13조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18조, 제25조, 제25조의2, 제27조, 제28조제3항, 제50조제3항 및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5항,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

2. 「도로교통법」 제25조, 제25조의2, 제27조 및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

② 공익제보단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57조의4(공익제보단 운영) ①</u> <u>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익 신고한 자(이하 “공익제보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2제3항, 제13조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18조, 제25조, 제25조의2, 제27조, 제28조제3항, 제50조제3항 및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5항,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</p> <p>2. 「도로교통법」 제25조, 제25조의2, 제27조 및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</p> <p><u>② 공익제보단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</u></p> |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|
| | <u>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 |
|--|-------------------|